광주시·전남도 "호남 2개 권역으로 분리해야"

■ 한나라 '호남·제주 정책협' 뭘 논의했나

광역경제권 '6+2' 또는 '5+3'으로 재조정

F1대회 등 지역 현안 선도산업에 포함을

한나라당과 정부가 2일 개최한 '호남·제주지역 정책협의회'에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5+2 광역경제권' 정책에 대한 전면 재조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이날 협의회에는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 정남준 행정안전부 2차관 등 정부 측 관계자, 광주·전남·북·제주시도 부단체장, 한나라당 광주시·전남도·전북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최종만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광역경제권이 현 인구를 기준으로 영남 2개, 호남 1개로 설정, 지역간 형평성을 무시했다"며 "향후 영남이 호남에 비해 2배 이상의 지원을 받게 된다면 지역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에 따라 "전북은 광주·전남과 산업연관성이 미흡하고 새만금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전북을 1개 권역으로 분리, '6+2' 또는 '5+3'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최 부시장은 또 "호남권 선도프로젝트 및 선도산업이 기존 사업 위주로 선정돼 지역발전 선도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신규사업으로 재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욱 한나라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내 각종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품격있는 문화국가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명박 대통령 공약 사항대로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을 광주에 설립해야 한다"며 "또 광주의 생활가전산업과 연계한 가전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국비 115억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전남도**=박재영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정부의 지방대책이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종합적이지 않고 산발적이다"며 "특히 전남도와 같은 낙후지역에 필요한 대책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부지사는 이어 "▲선도프로젝트에 호남권은 5개, 영남은 10개 사업이 선정되고 ▲신규 국가산단으로 영남은 3개, 호남은 1개가 조성될 뿐 아니라 ▲조선산업 용지 공급 계획에도 영남은 6개소이지만 호남은 2개소뿐인 등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산단 조성, R&D 및 SOC 지원 등에 있어 낙후지역을 우선 고려하는 등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의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 F1대회,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글로벌 농식품 물류기지 건설 등 지역 신규 사업이 선도프로젝트에서 누락됐다"며 이들 현안 사업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정부 측 관계자는 "지자체 건의사항은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최대한 반영, 8일 발표할 것"이라며 "건의사항 중 효과가 크고 검토가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또 "8일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균형발위원회 기획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지방발전 제도개선 대책반'에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대규모 재정 소요가 수반되는 사항은 내년 상반기 지방재정제도 개편 방안, 광역발전계획, 초광역개발권 기본계획 수립시 종합 검토해서 2010년 이후 반영이 가능하도록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서남권 발전계획' 통과 관심

내일 중도위 심의

목포·무안·신안 등 전남 서남부 지역의 개발 프로젝트인 '서남권종합발전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 중앙도시심의위원회가 4일 열린다.

'서남권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중도위 심의는 J프로젝트 등 전남도의 각종 대형 프로젝트들이 중도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게 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서남권종합발전계획은 목포·무안·신안 일원에 올해부터 2020년까지 모두 24조6천억원을 투자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다.

이곳에는 복합관광클러스터 조성, 신재생 에너지산업 육성, 지역특화산업, 물류 등 4대 과제와 사회간접자본(SOC)을 갖춘 인구 60만명 이상의 자족적 중핵 도시권이 형성될 계획이다.

올 초 '서남권특별법'이란 이름으로 국회에 상정돼 서남권종합개발사업의 재원과 정부지원 체계 등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법사위에서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가 '신 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으로 법안 이름이 수정되면서 극적으로 통과됐다.

국토부는 서남권종합발전계획이 4일 중도위 심의에서 통과되면 이달 중으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을 1차 지정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발전촉진지구를, 하반기에는 투자촉진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남도의 J프로젝트와 F1국제자동자경주대회 등 각종 투자개발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서남권종합발전계획까지 중도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역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토부와 전남도가 협의를 통해 새정부가 제정한 신발전지역특별법에 따라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한 만큼 중도위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며 "발전계획이 본궤도에 오르면 서남권 발전의 중추계획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비정규직 전면 철폐하라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2일 광주시 북구 한나라당사 앞에서 조합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 전면 철폐 등을 촉구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BIE회원국 참가 유치 활동 본격화

■ 여수박람회 승인 의미와 전망

정부 차원 민자유치 구체적 대책 서둘러야

박람회장 접근성 담보 SOC 확충 과제로

여수세계박람회가 세계박람회기구(BIE)로부터 공식 승인됨에 따라 박람회조직위원회는 내년부터 박람회장 착공과 더불어 참가국 대표를 초청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등 박람회 공식 개최국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박람회 유치국가는 BIE협약에 따라 박람회 개최 기본계획을 수립해 이를 BIE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공식 개최국으로서의 활동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의미와 전망**=이번 BIE의 승인은 사라고사 박람회 등 기존의 박람회에 비해 1년 이상 빠른 것으로, 여수박람회조직위는 본격적인 활동기간을 그만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장승우 조직위원장도 지난 4월 취임 이후 "박람회는 세계의 축제인 만큼 참가국을 많이 유치하는 게 필수적이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박람회에 대한 BIE의 최종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조직위는 그동안 내부에 국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략기획단'을 운영하면서 수시로 해양·건축·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분야의 해외전문가들을 초청해 총회 조기 승인을 위한 '박람회 개최 기본계획'을 작성해왔으며, 지난달 25일 기본계획안을 확정·발표했다.

조직위는 이번 BIE의 공식 승인을 계기로 내년부터 2단계 조직확충을 통해 박람회 개최에 본격 대비할 방침이다. 여수 현지 박람회장 예정지의 보상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박람회장 조성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또 154개 BIE회원국과 기업들을 상대로 참가유치 활동을 본격화하고 기본계획안을 토대로 세부 시행계획안을 마련하는 한편 전남도와 여수시의 의견을 수렴, 기본계획안에 대한 수정·보완작업을 함께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과제**=여수박람회는 전체 사업비의 1/3가량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하도록 되어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의 극심한 경기침체로 민자유치 자체가 어려워진데다, 몇몇 사업의 경우 순수 민자사업으로는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일부 공공보조를 통해 민자유치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성사여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민자유치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여수박람회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유인책을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여수박람회장에 대한 양호한 접근성을 담보할 SOC 확충도 관건이다. 목포~광양 고속도로, 여수산단진입도로, 국도 77호선(돌산~화태) 건설, 여수공항 활주로 확장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투입이 없다면 오는 2012년 상반기까지 완공이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여수세계박람회는 2012년 5월12일부터 8월12일까지 3개월간 여수신항 일대 174만㎡의 부지에서 열리게 되며, 100여 개 국가에서 800여 만 명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전국적으로 12조3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7만 9천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수도권 관련 '법률안 대결'

한, 정비계획법 폐지안 상정 유보

선진당, 규제 완화 저지 법안 제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뉘어 진행되던 수도권 규제 완화 관련 '법률안 대결'이 잠시 주춤하는 양상이다.

한나라당 경기도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2일 애초 이번 주 계획했던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법안' 발의를 잠시 미루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충청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 무력화하는 법률안 개정안을 제출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지방의 반발은 그칠 줄 모르고 있다.

원유철 경기도당 위원장을 비롯, 임해규·신상진·김영우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도당 긴급 상임운영위원회를 열고 수도권 규제에 대한 정부 조치를 더 지켜본 뒤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법안'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의원들은 이날 모임 직후 "8일 정부가 발표하기로 한 지방발전종합대책의 내용과 지난 10월30일 발표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이행 과정을 지켜본 뒤 폐지법안 제출이나 규제완화 법안의 개별 발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수도권 규제 완화 저지를 위한 법안 투쟁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이재선 의원은 이날 정부가 수도권 내에서 공장 신·증설 등 행위제한을 완화할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와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